

2016년 북일면 정기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2016. 3. 8. ~ 3. 11.(4일간)
- **감사대상기간:** 2013. 11. 1. ~ 2016. 3월 현재
- **감 사 반:** 감사담당외 5명
- **지적사항: 26건**
 - 처분종류: 26건(시정 13, 주의 13)
 - 재정상: 2,257,800원(회수 1,433,800 / 추정 624,000 / 기타 200,000)
 - 신분상: 6명(훈계1, 주의5))



해 남 군
[감 사 담 당 관]

2016년 북일면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

I 감사 개요

1. 기본방침

- 가.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6대 중점과제 집중 감사
- 나.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감찰)활동 전개
- 다. 업무추진에 따른 제약요건 등을 개선하는 사전 예방에 중점
- 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2. 감사 중점사항

- 가. 군정시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의 감사 실시
 - 업무를 틀을 바로 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
 -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방안 검토
- 나.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공직자 기본자세 6대 과제 지속 점검하여 행정의 기본 체질 강화
 - 행정재산, 민간위탁사무 등 취약업무 주기적 점검체계 확립
 - 취약업무 지속 발굴, 행정의 자기 통제 시스템 확립
 - 언론보도, 군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 점검
 - 계약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여부 중점 감사
- 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감사대상을 일한 내용보다는 부작위 행위로 전환
 - 적극적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적용

- 감사결과 문제점, 위법사항 발견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
- 공금횡령, 토착비리, 고의적 봐주기성 업무처리 반드시 문책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고의 민원사항 처리 지연행위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

3. 감사 총평

-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을 지역에 충실히 추진한 결과 15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을 달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우수기관, 조기집행 우수기관, 친환경농업 우수기관 등 뛰어난 성적을 거양하였음.
- 군정 주요시책을 지역민에게 전파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매년 중요한 성과를 나타내는 등 타 읍면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함.
- 하지만 5일시장 관리, 보고문서 보고 및 기한준수 등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이 미비한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읍면사무소의 특성상 담당업무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나 최근 읍면에 신규공무원이 많이 배치되고,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면장과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신규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업무숙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업무담당자는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면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자세가 필요함.

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건 명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원)				비 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13	13	2,257,800	1,433,800	624,000	200,000	
1	보고문서 미보고 및 보고기한 미준수		○					
2	업무대행자 미지정		○					
3	보안업무처리 및 관리 소홀	○						
4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부적정		○					
5	보존문서 관리 소홀	○						
6	5일시장 관리 소홀	○						
7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						
8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추진 소홀	○						
9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처리 소홀		○					
10	수익계약 상대자 청렴서약서 징구 소홀		○					
11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감독 소홀	○		852,000	852,000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		200,000			200,000	
13	건설공사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		333,000	333,000			
14	'15년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점검 소홀	○		85,160	85,160			
15	'15년 흑염소 사료급여기 지원사업 정산 소홀	○		163,640	163,640			
16	'15년 농림분야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운영 소홀		○					

연번	건 명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17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소홀		○					
18	공중목욕장 관리 소홀	○						
19	경로당 보조금 정산 소홀		○					
20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업무 소홀		○					
21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절차 부적정		○					
22	세출예산 집행 소홀		○					
23	이자수입 관리 소홀	○						
24	관외 출장 증빙서류 구비 소홀		○					
25	취득세 부과요구 소홀	○		624,000		624,000		
26	납세자 과세정보 보호 소홀		○					

2. 분야별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 분야

1) 보고문서 미보고 및 보고기한 미준수

가) 지적사항

- 해남군 보고 및 협조문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신속·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보고의 억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추구 및 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한 각종 시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보고 및 협조문서의 기한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해남군 감사담당관 -3100(2014. 8. 25)호의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추진계획을 통하여 보고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보고기한을 준수토록 강조한 바 있음.
- 북일면에서는 보고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미보고 또는 보고 지연 등 소홀히 하였음.
 - ☆☆ ◇급 ○○○: 12건 / 미보고 및 기한 미준수
 - ☆☆ ◇급 ○○○: 7건 / 미보고 및 기한 미준수
 - ☆☆ ◇급 ○ ○: 1건 / 기한 미준수
 - ☆☆ ◇급 ○○○: 5건 / 미보고 및 기한 미준수
 - ☆☆☆☆ ◇급 ○○○: 1건 / 기한 미준수
 - ☆☆ ◇급 ○○○: 5건 / 미보고 및 기한 미준수
 - ☆☆ ◇급 ○○○: 6건 / 미보고 및 기한 미준수
 - ☆☆ ◇급 ○○○: 3건 / 미보고 및 기한 미준수

나) 조치의견

- 공문서는 반드시 결재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보고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2) 업무대행자 미지정

가) 지적사항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6조(업무의 인계)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급 ○○○외 1명(2건)은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함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하였음.

나) 조치의견

- 장기출장(교육, 휴가 등)시에는 업무공백이 없도록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바람.

3) 보안업무처리 및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보안업무 규정 제6조(비밀의 취급), 제8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23조(비밀의 열람), 제2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0조(재분류검토), 제28조(보관책임자), 제29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제36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6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제67조(보안교육), 제68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보안교육), 제51조(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관리하게 되어있음.
- 북일면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23조(비밀의 열람), 제2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0조(재분류 검토), 제28조(보관책임자), 제68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5조(재분류 검토 및 비밀보유현황 조사), 제27조(직권에 의한 비밀파기), 제37조(비밀관리기록부), 제49조(보안교육) 등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나) 조치의견

-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부적정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사무 인계인수규칙에 의하면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남군 행정지원과-13018(2014. 8. 6)호 및 감사담당관-3100(2014. 8. 25)호로

6급이하 공무원도 서면에 의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인계인수 내용에는 군정 중점사항, 중요지시사항, 추진중 또는 미결업무, 민원발생 사항, 신규시책, 행정재산, 위탁사무등 후임자가 알아야할 제반사항을 포함하도록 시달한 바 있다.

- 북일면에서는 2014. 8. 5.이후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변경자 29명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 인계자와 인수자 불분명, 작성확인자 및 입회자 부적정 등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인계인수규칙을 준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업무추진 현황을 충실히 하여 내실 있는 인계인수가 되도록 하시기 바람.

5) 보존문서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 분류, 편철 등),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26조(보존기간), 규칙 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15조(기록물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관리하게 되어 있음.
- 북일면에서는 기록물철을 보존기간별, 생산년도별로 구분하여 총괄 현황을 관리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보존연도별로 별지 구분 작성하지 아니하고 생산년도별로만 별지 구분하고 보존년도는 혼용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고 또한 보존년도별, 생산년도별 순서에 의거 문서처리 하지 않고 각 담당별로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음.

나) 조치의견

- 문서고를 재정비하고, 기록물철을 생산년도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총괄현황을 관리하시기 바람.

6) 5일시장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허가), 제6조(사용료), 제8조(보증금),

제10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제12조(시설의 변경), 제16조(인체유해품 및 위험물 취급금지), 제17조(사용제한), 제2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 해남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등급), 제3조(시장사용허가), 제5조(보증금),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11조(대장비치)의 규정에 의거 시장현황 및 허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북일면에서는 사용허가 관리 부적정, 위탁계약 미체결, 상인회 명단 확인 소홀, 시설관리 소홀, 미사용 장옥 방치, 시장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부당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시기 바람.

나. 공사 분야

1)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 등 표시기간의 연장), 해남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3조(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군수(읍·면장)는 허가(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 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 연장 또는 폐쇄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응 또는 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철거조치를 하여야함에도,
- 북일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인 ☆☆☆☆☆(광고주 ○○○○) 등 광고물 표시종료기간이 만료된 11개소의 광고물이 2016. 3. 11. 현재까지 철거 또는 연장되지 않고 있는 등 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관련법 규정을 숙지하여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안내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철거 등 조치를 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거를 기하기 바람.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농업촌정비법」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제4항에 의하면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 할 수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3~2015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일면 ☆☆길 31-17” 등 8동의 빈집을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여야 하나, 7동만 말소하고 1동에 대하여는 2016.3.11.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지 않는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빈집정비 후 말소하지 않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이후 추진하는 사업부터는 빈집정비 완료후 건축물말소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시기 바람.

3)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처리 소홀

가) 지적사항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를 작성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14~ ‘16.현재까지 총 18건중 2015년도에 신고처리한 6건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정화조 방류수관 규격 및 기존 하수도 연결 방법인 배수계통도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보완하지 않고 신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개인정화조 신고서가 접수되면 설계도서 검토를 세밀히 하고, 배출수 처리 개통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수의계약 상대자 청렴서약서 징구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제공금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 하면서 청렴서약서 징구를 소홀히 하였음.

나) 조치의견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시기 바람.

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1) 건설공사 착공신고서 검토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1) 제20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에는 건설공사 착공시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를 포함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착공전 사진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하여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개공사 시행에 따른 착공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착공전 사진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지시를 하지 않는 등 착공신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2)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확인 소홀

-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5톤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으로 선임된 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양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및 반출 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3) 건설공사 감독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4-297(2014.5.2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성실의무)에 의하면 공사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고

1) 국토교통부 고시 2014-297호(2014. 5. 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제7절(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토건(대표 ○○○)과 계약 체결한 「◇◇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스틸그레이팅을 시공하기전 콘크리트를 보호할 목적으로 받침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받침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277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 과다 집행

★★종합개발(대표 ○○○) 및 △△토목(대표 ○○○)과 계약 체결한 「☆☆ 농로 포장공사」와 「☆☆ 농로 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의 부분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따기를 시행코자 면대를 시공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이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220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 과다 집행

○○토목(대표 ○○○)과 계약 체결한 「☆☆ 농로 포장공사」는 현지 여건이 한쪽면은 석축이 시공되어 있어 기존 석축의 천단부를 포장 거푸집으로 활용 하였으므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약금액 조정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35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하는 등 전체 4건에 대하여 852천원의 예산을 과다집행 하였음

나) 조치의견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852천원은 회수하시고 이후 착공신고서 검토 및 폐기물처리 확인 등 건설공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가) 지적사항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 매입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의 준공 대가를 지급하면서 240천원 상당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나 40천원 상당의 공채를 매입하여 200천원 상당의 공채가 부족하게 매입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나) 조치의견

- 부족하게 매입된 200천원 상당의 공채를 추가 매입하시기 바람.

7)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정산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1)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4호-2013.11.20.)」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고, 기성대가 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고,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의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 농로 포장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보험료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산하지 않고 264,080원을 지출하였음

(2)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미수립 및 정산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용도는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환경계측비용, 환경관련 인건비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보전비가 계상된 건설공사는 착공전에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환경보전비가 적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북일면에서는 “☆☆ 안길 정비공사”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면서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 하지 않았는가 하면, 준공과정에 환경보전비를 정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방진마스크 구입 등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경보전비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승인처리 하고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환경보전금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나) 조치의견

-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333천원은 회수조치 하시고 앞으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확인 및 보험료 정산 업무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다. 농정분야

1) '1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점검 소홀

가) 지적사항

- 201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시 대상농지, 농업인, 무단 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 면적, 전년도 자료와의 대차 정비, 신규 필지 등을 확인조사 및 심사하고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직불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지원사업 추진중 신규 필지 등에 대한 확인 조사 및 심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불제 대상 필지 면적보다 추가 지원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잘못 지급된 직불금 85,160원을 회수하시고, 직불제 신청 신규필지 현지 조사 및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 '15년 흑염소 사료급이기 지원사업 정산 소홀

가) 지적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제4항 별표2의 3에 따르면 축산급이기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북일면에서는 위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27,270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초과 집행한 보조금 163,640원을 회수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이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시기 바람.

3) '15년 농림분야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운영 소홀

가) 지적사항

- 북일면에서는 소규모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은 경지면적 0.1ha이상 2ha미만 소규모 농업인에게 농기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13농가중 2ha이상 2농가, 대형농기계 소유 3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으며,
- 또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은 2ha미만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원예 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수도작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북일면에서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자 평가표 기준 3에 친환경 인증면적 평가시 친환경 인증면적에 수도작 면적을 잘 못 반영하여 2농가에 지원하였음.
- 북일면에서는 농정심의회 운영시 평가표 기준 및 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심의회를 운영하여 지원대상 농가 선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기준표 작성 및 평가 실시하시고, 관련 증빙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라. 복지분야

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소홀

가) 지적사항

- 수급자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작성제출 받은 후 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3.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발급한 수급자증명서 104건에 대해 신청서를 받지 않아 수급자증명서 발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수급자증명 발급신청서를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람.

2)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지도감독)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북일면에서는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목욕장을 2014년 1월 23일부터 위탁운영하면서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등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담당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3) 경로당 보조금 정산 소홀

가) 지적사항

- 주민복지과-5159(2014.1.15.)호, 주민복지과-2334(2015.1.8.)호로 「노인여

가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읍·면에 통보하였다. 이 지침의 지원 기준에 따르면 ” 운영비는 경로당 유지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비, 경로당내 회의 시 소요되는 부식비, 중식 재료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선진지 견학비,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중식비(식당), 임원수당, 노인회 연회비 등 집행 불가” 라고 되어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 실시한 2014~2015년 경로당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북일면 ☆☆경로당 외 24개 경로당에서 노인회 연회비, 식당에서 식사 대금으로 14,742,000원을 집행하여 경로당운영비 집행기준을 미준수한 경로당이 있는 등 경로당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경로당 대표 및 총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노인회 연회비, 식당에서의 중식비 지출은 불가함을 안내하기 바람.

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자치부)에 따라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4~2015년 대리인에게 121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121건에 대하여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은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3건의 위임장에 위임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없고, 4건의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구비서류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위임장에 위임 일자를 기재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시고, 접수후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절차 부적정

가) 지적사항

- 읍면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며, 읍면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북일면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함에 있어 위원회의 개최후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여야함에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장이 임의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지역민방위협의회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 호선에 의해 선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 세출회계분야

1) 세출예산 집행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6호 아목에 의하면 연말, 설, 추석 및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8호 가목에 의하면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 구입은 읍·면·동의 경우 하나의 독립 기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7건 1,678,150원을 부적정한 지출과목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세출예산 집행 시 적정한 지출과목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수입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군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제Ⅴ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4.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의하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으로 2014.3.23.부터 2015.12.27.까지 발생한 이자 8건 3,649원과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2013.6.23.부터 2015.12.27.까지 발생한 이자 6건 4,941원 등 총 14건 8,590원을 군 세외수입 반납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는 등 이자수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이자발생액 8,590원을 군 세외수입으로 반납하시고, 이자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관외출장 증빙서류 구비 소홀

가) 지적사항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 집행시 출장일수가 2일이상인 경우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이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를 1점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자료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2일 이상 관외 출장을 2013년에는 2회 실시하고

800,000원, 2014년에는 1회 실시하고 500,000원을 집행하면서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1점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2일 이상 관외출장 시 출장복명서의 입증자료 1점 이상을 구비하시기 바람.

바. 세무분야

1) 취득세 부과요구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세 과세누락 방지 및 세원발굴을 위해 실시한 2015년 지방세 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 통보(세무회계과-11005호/2015. 4. 29.)에 의하면 분야별 사전 점검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사분야에서는 농산물유통 지원사업으로 신축한 저온저장고가 과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5년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신축한 ☆☆길18-49 ○○○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2건을 조사 누락하여 취득세 624,000원을 부과요구하지 않은 등 지방세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부과누락된 이륜자동차 2건 624,000원을 부과요구하시기 바람, 앞으로 지방세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미준수

가) 지적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통보(세무회계과-7734 /2014. 3. 7.)에 따르면 제3자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과세증명서 등을 위임 발급 신청할 경우 개인일 때는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법인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발급 담당자가 민원24 또는 e하나로민원

(www.share.go.kr) 등에서 확인 후 발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4. 3. 21.부터 2015. 8. 19.까지 제3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을 위임 발급 시 제증명발급담당 공무원은 위임자 등의 신분증을 징구하지 않는 등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제3자에게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징구하시고, 납세자 과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